檢, 盧수사 종결…"불구속 예정이었다"

피의자 노무현 사망 '공소권 없음' 결정
임채진총장, 내부 의견 "구속 반대" 파악

임채진 검찰총장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피의자였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하고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은 모두 참고인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만큼 640만 달러 전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단될 전망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며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문성우 차장과 각 부장 및 기획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사인에 의혹이 없도록 검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대검 간부들은 24일까지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사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검찰이 애초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임 총장이 검찰 내부 인사들을 몇개 그룹으로 나눠 광범위하게 의견을 직접 물어본 결과, 모든 그룹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채진 총장은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직후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 전직 검찰총장 10여명 등 3개 그룹을 정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의견과 그에 대한 이유를 청취했다.

임 총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인 만큼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수사부 수사팀의 입장은 물론 검찰 내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3개 그룹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초기부터 세워놨었다고 한다. 의견 청취 결과 3개 그룹에서 각각 비슷한 비율로 불구속 기소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세간에 알려진대로 노 전 대통령의 '공식 후원자'였던 데다 박 전 회장의 개인 돈 640만 달러(당시 환율 64억여원)가 건너간 점,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받은 점,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총장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당초 이달 4~6일께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권양숙 여사가 박 전 회장한테 받아썼다고 주장했던 3억원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되면서 권 여사를 다시 부를 필요성이 생겨 재소환 조사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일정이 조율됐다.

특히 지난 9일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측의 미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새로 드러나고, 이 돈으로 계약했다는 160만 달러짜리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권 여사 소환이 지금까지 미뤄졌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23일 오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로 드러난 40만달러 때문에 수사 길어져

盧 前대통령 자살 이르게 한 '박연차 게이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미국 아파트 구입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왔다.

노 전 대통령은 우선 재임 중인 2007년 6월 박 전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퇴임을 앞둔 2008년 2월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혐의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500만 달러가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대가성 없는 정상적인 투자금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노 전 대통령이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었으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06년 노 전 대통령 부부의 회갑 선물로 억대의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2개 선물한 사실도 찾아내 기소할 때 포함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까지는 지난 4월30일 소환조사 이전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혐의들이며, 조사 이후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다.

정연씨가 2007년 9월 박 전 회장의 돈 40만 달러를 송금받아 미국 뉴저지주의 아파트 허드슨클럽 400호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이 돈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부분 혐의와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으로 일관해왔지만, 각각의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가족이 연루돼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덕적 비난에 직면해왔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었지만 40만 달러 의혹이 새로 제기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신병처리가 미뤄져 왔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과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부분 수사는 사실상 보류된 상태였다. 남 전 사장의 유족도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 형 건평 씨가 인사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점을 문제삼아 작년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盧-檢, 28년 악연 종지부

구속→개혁 갈등→소환, 투신으로 막내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28년간 이어졌던 그와 검찰간의 질긴 악연도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1년 20여명의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좌익사범으로 기소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처음 검찰과 맞섰다. 이후 꾸준히 노동자와 학생 편에서 변호사로 일한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의 사건에 개입했다며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과 수감 경험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화두로 올린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당시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 서열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던 검찰 조직의 강한 불만을 샀다.

그는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과 평검사간 대화를 시도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뾰족한' 질문을 이어가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언급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기도 했다.

검사와의 대화가 끝난 직후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이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하며 자진사퇴하는 등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됐다.

퇴임 후 검찰과 악연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다.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대검 청사에 소환되는 불운에 처한 것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투신해 오랜 악연을 끝냈다. /최경호기자 choice@·연합뉴스